

전산망

국무조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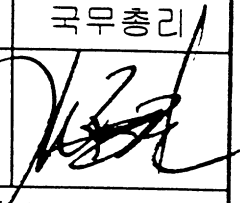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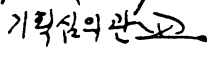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3703-2157~60 / 전송(02)732-7155
규제개혁조정관실 규제개혁1심의관 박남훈 과장 최기조 사무관 정현용

문서번호 국무규제 05090-287

시행일자 1999.11.4.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보존기간	년	실 장	국무총리
공개여부	공개		
조정관			
심의관		기각심의관 	
과 장			
◎★기 안	정 현 용		
심사자		심사일	

협조

제 목 「2000년도 규제정비지침」 시달(국무총리지시 1999-27 호)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에 의거 정부가 2000년도에 추진할 규제정비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각 부처에서는 동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바랍니다.

첨부 : 2000년도 규제정비지침 1부. 끝.

국무총리

수신처 : 가 15~16, 19~20, 31~47, 52~55, 57~67

國務總理 指示
第1999- 號

2000年度 規制整備指針(案)

‘99. 11

國 務 調 整 室

= 目 次 =

I. 規制改革 推進実績	1
--------------------	---

II. 規制改革의 評價와 向後 推進方向

1. 評 價	5
2. 2000年度 規制改革 推進方向	6
3. 推進戰略	7

III. 2000年度 規制整備 施行指針

1. 重點規制改革課題 등의 整備	8
2. 規制의 品質 提高	9
3. 地方自治團體 規制改革 推進	9
4. 準公共機關 規制의 整備.....	10
5. 規制改革 事後管理의 徹底	10
6. 規制總量의 嚴格한 管理	11
7. 公務員에 대한 規制改革 敎育 強化	11
◆ 2000年 推進 重點課題(例示)	12

I. 規制改革 推進実績

□ 中央行政機關 所管規制의 全數調査 및 一括整備

第1段階 ('98)

- '98년 전체규제의 48%를 폐지하고 22%를 개선하여 70%를 정비
 - 344개 규제개혁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98개 법률의 개정을 완료(87%)하였으며, 43개 법률은 국회계류중
 -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경우, 934개 개정대상 법령중 790개의 개정을 완료(85%)

第2段階 ('99)

- '98년 규제정비이후 존치된 잔존규제 전체에 대해 국책연구소(15개) 및 민간연구소(15개)의 사전검토결과를 토대로 규제정비작업을 추진하여 잔존규제의 15.8%를 정비
 - 37개 부처청 잔존규제 총 6,820건중 폐지 503건(7.4%) 개선570건(8.4%)

〈 주요 정비내용 〉

- △ 일부 증권업종 (위탁매매업 등)의 등록제 전환 (2000년말, 재정경제부)
- △ 품질보증 인증기관·연수기관 지정권한 등 민간이양 (산업자원부)
-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선(보건복지부)
- △ 대학원 정원 자율화 (교육부)
- △ 전기통신설비 (이동통신기지국 등) 공동구축 제한 폐지 (정보통신부)
- △ 일반·전문건설업의 겸업·영업범위 제한 폐지(2002년, 건설교통부)
- △ 일정규모이하의 양곡가공업 (제조·제분업) 등록제 폐지 (농림부)

□ 核心課題 規制改革

第1段階 ('98)

- '98년에 외국인투자관련 규제개혁방안,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등 37개의 핵심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 주요 추진완료 핵심과제
 - 건설산업분야 규제개혁방안
 - 자동차관련 규제개혁방안
 - 물류·유통부문 규제개혁방안
 -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개혁방안
 - 수출입 통관관련 규제개혁방안
 - 벤처산업관련 규제개혁방안
 - 관광산업관련 규제개혁방안
 -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등

第2段階 ('99)

- '99년에는 33개 과제를 선정, 지금까지 22개 과제의 추진을 완료
- 주요 추진완료 핵심과제
 -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방안
 - 주택공급 자율성 확대방안
 - 비업무용 토지제도 개선방안
 - 산업안전검사 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
 - 각종 증명민원제도 개혁방안
 - 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규제개선방안
 - 자동차 운수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등

□ 現場中心의 規制改革 推進

-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국민적 지지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수립·추진
 - 상시 점검단을 설치하여 매 2개월마다 지방자치단체를 위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99. 5월, 7월, 9월)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실적 (1차~3차) >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 계	심사없이 규제신설	규제 누락등	소 계	폐지규제 계속운영	법령 미근거 규제	법정의 서류정구 등	후속조치 지연 등
269건	28	8	20	241	82	64	68	27

< 주요 시정사례 >

- ▲ 자체 규제사무 발굴 정비실적이 없고 규제개혁통보 및 직원교육 미흡으로 개정전 종전 규제를 계속 집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제개혁추진이 부진 (경기 의정부, 전남 순천) ⇒ 기관경고
- ▲ 건축법령 등이 개정(99.4.30)되었음에도 시·군 건축조례의 개정 지연 등 조례·규칙개정지연 (경남 창원, 대전 서구, 전남 구례 등) ⇒ 조례·규칙 조속정비 촉구
- ▲ '99.4부터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문건설업 양도시 인가제가 신고제로, 건설업 변경사항 신고제가 등록수첩 기재사항 정정으로 각각 개선되었음에도 종전규제로 계속 운영 (부산중구, 대구중구, 충북옥천, 전남 해남, 경북칠곡, 경남창원) ⇒ 관련자 문책 및 시정조치
- 기업과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관련부처에 규제 개혁작업단을 설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지원단 (행정자치부)
 - 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산업자원부)
 - 경쟁제한 규제개혁작업단 (공정거래위원회)

□ 地方自治團體 規制改革 推進

-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총 규제사무 67,906건중 37,804건 (56%)에 대한 정비계획(폐지 26,725건, 개선 11,079건)을 확정하여, 이중 29,948건(79.2%)의 정비를 완료('99.9.31현재)

□ 法令 未根據 規制의 整備

- 법령 미근거 규제 1,840건을 발굴, 1,466건(79.9%)을 폐지하고 162건 (8.8%)은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나머지 212건에 대해서는 '99.2.1부로 운용을 중단토록 조치

□ OECD規制改革 國別審査

- '99.7, OECD규제개혁팀이 내한하여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역량, 경쟁정책, 전기, 정보통신 등 각 부문에 걸쳐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 추진실태를 현지 조사
 - 2000년초에 OECD에서 한국 등 4개국에 대한 규제개혁심사회의 개최예정

□ 新設・強化規制에 대한 事前審査

- '98.6월이후 총 976건을 심사하여 107건 (11%)의 규제를 철회하도록 권고했으며 240건 (24.5%)의 규제는 개선하도록 권고

II. 規制改革의 評價와 向後 推進方向

1. 評 價

- 그동안 우리나라 전체 행정규제 총 11,125건중 절반수준의 규제폐지를 포함하여 약 70%를 정비
 - 「산업연구원」은 향후 5년간 국민비용절감 18조원('97 GDP의 4.4%), 정부비용 절감 6천억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
 - 민간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도 규제의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규제 개혁지수가 약 47% 개혁된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도 상존
 - 규제를 집행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규제개혁 효과의 파급·확산 부진
 -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을 주도하는 하향식 개혁으로 일선규제 집행기관의 자발적 참여 결여
 - 물량위주의 규제개혁에 치우쳐 규제의 품질향상 미흡
 - 환경, 보건·위생, 안전, 소비자보호 등에 관련된 규제는 규제의 대안을 개발하여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
 -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사전심사가 불충분하고 정책입안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가 결여

2. 2000年度 規制改革 推進方向

□ 21세기에는 신지식·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사회가 도래,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해 지고,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전망

☞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기업의 경쟁력과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각종 경제 관련규제를 더욱 과감히 정비

□ 또한,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규제의 품질을 제고

☞ 보건·위생·환경·안전 등 공익적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



21世紀 知識・情報化 社會에 걸맞는
새로운 行政文化의 創出

3. 推進戰略

□ 重點課題 中心의 規制改革 推進

- 신지식·신기술 사회의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걸맞는 중점개혁 과제를 선정, 소관 부처별 정비계획을 수립·추진
(행정의 안정성을 감안, 기존규제 전면 정비방식은 지양)
- 환경·안전 등 사회적 규제의 경우, 규제대안개발 등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여 국민들의 규제 순응도를 높이는데 주력

□ 國民들의 規制改革 體感度 向上

- 지방자치단체의 제2단계 규제전수 정비작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균형있는 규제개혁을 도모
-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는 각종 준공공기관 (정부산하단체·협회 등)의 규제를 일제 정비
-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점검을 강화하여 일선 공무원의 규제집행 행태를 개선

□ 規制總量의 嚴格한 管理

- 규제의 신설 및 폐지를 종합관리하는 「규제총량 관리계획」 수립·보고를 의무화
- 비용·효과분석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기법을 개발·보급하고 규제 일몰제를 더욱 확대 실시

Ⅲ. 2000年度 規制整備 施行指針

1. 重點規制改革課題 등의 整備

- 중앙행정기관은 첨부에서 예시한 중점과제를 포함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99.12월말까지 개혁과제명과 주요 개선방향, 추진일정 등 「2000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작성서식 1호 참조)
- 과제의 선정 및 추진은 피규제자인 국민과 기업이 개혁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지향적 정비방식(규제 map 등)을 적극 활용
- 특정분야에 대한 규제 map작성 등 필요시 각 부처별로 용역사업 추진
-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중점규제개혁과제를 토대로 개혁과제명과 그 추진일정 등을 조정하여 2000년 1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규제개혁과제의 추진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국무조정실과 협의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 규제개혁방안 마련시에는 피규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드시 첨부

2. 規制의 品質 提高

- 규제의 대안개발 등을 통하여 규제중심의 행정문화를 개선
 - 정부가 소비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유지하고 있는 규제의 상당부분을 「제조자와 소비자간의 관계」 즉 소비자에 의한 감시관계로 전환시키고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
 - (예) 제조물책임법 등의 제도가 마련될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당부분의 규제에 대하여는 폐지를 검토
- 준수율이 낮은 규제의 정비
 - 중앙행정기관은 특정규제에 대한 준수율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정비계획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준수율이 일정수준(예:50%) 이하인 규제에 대하여 해당부처에게 규제정비계획 작성을 요구
 - 해당부처는 위원회에 준수율이 낮은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개선대책을 추진

3. 地方自治團體 規制改革 推進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활성화
 - 행정자치부는 2000.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 잔존규제에 대한 2단계 전수 정비작업을 적극 지원
- 지방자치단체별(광역시,시,도,구,군 5개단체) 규제개혁 모델을 개발·보급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균형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지원
 - 행정연구원·지방자치단체경영협회 용역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델 개발(국무조정실)
 - 규제개혁 모델 보급·확산 지원 및 이행 점검(행자부)

4. 準公共機關 規制의 整備

- 정부산하 또는 유관단체·협회·법인등과 관련된 규제의 일제정비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직접규제 이외에 실질적으로 국민이 행정규제로 느끼고 있는 각종 부담을 완화
 - 법령 등의 근거에 의해 설립된 단체, 정부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등에 의한 규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 책임하에 일제조사하여 정비
- (예) · 협회에서 정한 서식만을 사용토록 하는 규제
 - 협회를 경유해야만 행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규제
 - 기타 협회나 단체의 정관·내규·사업계획 등에 의해 회원사를 구속하는 규제 등

5. 規制改革 事後管理의 徹底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개혁 사항 전체에 대하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조례, 규칙 등 규제가 현장에서 집행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이행실태를 파악·관리
- 중앙행정기관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결과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하위법령 개정사항, 시행예정일 명시)을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 (작성서식 2,3,4호 참조)
 - △ '98년도 규제정비계획중 미정비 규제에 대한 사유 및 이행계획과 '99년도 규제정비계획 이행상황을 '99.12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 2000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결과 시행계획은 의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업무의 경우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통보하고 관련 조례·규칙의 개정사항을 점검·확인

- 소극적·관례적인 집행을 막기 위하여 업무편람에 규제개혁 내용을 신속히 반영토록 하고 집행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개혁의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공정위, 법제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기상청, 농진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13개 기관은 점검대상에서 제외
- ※ 건설교통분야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99.9.2~9.10 건교부) 참조

6. 規制總量の 嚴格한 管理

- 중앙행정기관은 규제신설·강화 심사요구 또는 중점규제개혁과제 보고시 위원회에 소관 규제총량관리계획을 함께 제출
- 규제총량관리계획에는 규제신설계획과 함께 예상되는 규제폐지 계획도 포함
- 신설규제에 대한 영향분석(비용효과분석 포함)을 철저히 하여 규제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원칙적으로 규제일몰제를 적용

7. 公務員에 대한 規制改革 敎育 強化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하교육기관 및 직장교육의 교육프로그램에 규제개혁에 관한 강좌를 설치·운용
- 규제중심의 행정문화 전환 및 규제개혁마인드 확산
-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행정규제기본법 및 시행령의 내용
- 규제개혁에 따른 개선내용
- 규제영향분석(비용효과 분석 포함)의 기법과 실제 적용사례 등

2000年 重點 規制改革課題 (例示)

주관부처	중점과제명	추진일정
전부처 공동과제	1. 정부산하 또는 유관단체, 협회, 법인 등과 관련된 규제개선방안 ◦ 협회의 정관, 내규, 사업계획 등에 의한 불합리 한 규제개선 ◦ 개업하기 위한 협회비 납부의무 개선 ◦ 협회에서 정하는 서식만을 사용토록 하는 규제개선 ◦ 협회를 경유해야만이 행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규제개선 등	2000.6월
재정경제부	2. 동일인 신용공여관련 규제의 합리화 방안 3. 금융업 진입규제 및 겸업관련 규제개혁방안 4. 금융기관 영업관련 규제개혁방안	2000.7월 2000.9월 2000.11월
금융감독 위원회	5. 코스닥시장 건전육성을 위한 관련규제 개선방안 6.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관련 규제개선 7. 보험영업관련 규제개혁방안 8. 국공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2000.2월 2000.3월 2000.9월 2000.11월
공정거래 위원회	9. 산업의 진입, 가격 등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10. 대기업집단관련 규제개선	2000.5월 2000.9월
건설교통부	11. 도시계획 지역·지구제 개선 12.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관련 규제개선 13. 공공공사 입찰관련 규제개선(재경부협조) 14. 건축관련 규제개선 15. 토지이용관련 규제개혁방안(환경부 협조) 1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2000.3월 2000.4월 2000.6월 2000.9월 2000.10월 2000.11월

주관부처	중점과제명	추진일정
산업자원부	17. 수도권 산업입지 관련 규제개선(건교부협조) 18. 형식승인, 품질인증관련 규제개선 19. 에너지 이용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20. 전기공사 및 전력기술관리관련 규제개선방안	2000.6월 2000.7월 2000.9월 2000.10월
중소기업청	21. 중소기업 고유업종 관련 규제개선 22. 단체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제개선	2000.4월 2000.11월
관세청	23. 각종 보세구역 지정·운영관련 규제개선방안	2000.6월
행정자치부	24. 소방행정 관련 규제개혁 25.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증명민원제도 개혁방안 26. 광고물관련 규제의 합리화 방안 27. 지방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등 규제완화 방안 28. 인감증명제도 개선	2000.5월 2000.6월 2000.7월 2000.9월 2000.10월
교육부	29. 학원설립·운영관련 규제개혁 30. 학교정화구역제도 관련 규제개선 31. 외국인학교 설립관련 규제개혁방안	2000.3월 2000.5월 2000.6월
노동부	32. 고용보험관련 규제개선 33. 법정 퇴직금 관련 규제개선 34. 국가자격 검정관련 규제개선 35. 전자직업소개업 관련 규제개선 36. 근로자 공급 허가제관련 규제개혁	2000.5월 2000.6월 2000.8월 2000.10월 2000.11월
법무부	37. 출입국관련 규제개선방안	2000.6월
문화관광부	38. 영상·음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39. 문화재보호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40. 체육시설 설치·이용관련 규제개선	2000.4월 2000.5월 2000.6월
보건복지부	41. 보건분야 면허·자격 및 허가제도 관련 규제개혁 42. 의료보험관련 규제개선방안	2000.7월 2000.9월
식품의약청	43. 의약품 등 검사관련 규제개혁	2000.8월
국방부	44.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각종 행위제한 관련 규제개혁	2000.5월

주관부처	중점과제명	추진일정
병무청	45. 병역특례제도 관련 규제개선	2000.6월
경찰청	46. 자동차 운행관련 규제개선	2000.6월
농림부	47. 농업관련 인·허가 업무절차 간소화 방안 48. 축산관련업 진입규제 등 개선방안 49. 농촌개발 및 지원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2000.6월 2000.8월 2000.10월
산림청	50. 임산물 굴취·채취·매각관련 규제개혁방안 51. 산지의 보존 및 이용관련 규제의 합리화 방안	2000.5월 2000.10월
농촌진흥청	52. 농약유통 및 안전관련 규제개선방안	2000.7월
정보통신부	53. 인터넷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54. 자가통신설비 제도 관련 규제개혁 55.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 관련 규제개선 56. 정보통신사업 진입규제 등 개선 방안	2000.3월 2000.4월 2000.6월 2000.8월
환경부	57. 공원구역내 행위제한 규제개선 58. 환경관련산업 진입규제 합리적 개선 59. 폐기물 재활용관련 규제개선 60.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 관련 규제개선	2000.3월 2000.6월 2000.11월 2000.11월
과학기술부	61. 기술개발관련 규제개선방안 62. 위탁대행기관 관련 규제개선	2000.4월 2000.10월
해양수산부	63. 수산업 분야 진입규제 등 개선방안 64. 해운 및 항만산업 진입규제 등 개혁방안	2000.6월 2000.8월

【작성서식 1호】

2000년도 중점규제개혁과제 정비계획

중점과제명	규제현황	주요개선방향	상정일정

- * 중점과제명은 「2000년 중점규제개혁과제(예시)」를 포함, 각 부처가 발굴·선정
- * 부처별 유사행정규제(민민규제) 정비방안은 전 부처가 중점과제로 선정·추진
(전부처 공통과제)
- * 상정일정은 분과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월을 기입

【작성서식 2호】

‘98년도 규제정비계획중 미정비 규제

규제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규개위 의결내용	정비대상규정	미정비 사유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 조 ·○○○법시행령 제○ 조 ·○○법시행규칙 제○ 조 ·○○ 고시, 예규 지침 등 제○ 조 ·○○에관한 조례준칙 제○ 조 		

* A4형 양식으로 작성

【작성서식 3호】

‘99년도 규제정비계획 이행상황

규제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규개위 의결내용	정비대상규정	이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법 제○ 조 · ○ ○ ○ 법시행령 제○ 조 · ○ ○ 법시행규칙 제○ 조 · ○ ○ 고시, 예규, 지침 등 제○ 조 · ○ ○ 에관한 조례 준칙 제○ 조 	

* A4형 양식으로 작성

* 이행상황란은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정비일자를 기재하고, 정비일과 시행일이 다른 경우에는 시행일을 명시. 현재 추진중일 경우에는 추진상황 및 정비 완료예정월을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서식 4호】

2000년도 규개위 의결결과 추진계획

규제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규개위 의결내용	정비대상규정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 조 ·○○○ 법시행령 제○ 조 ·○○ 법시행규칙 제○ 조 ·○○ 고시,예규,지침 등 제○ 조 ·○○ 에관한 조례준칙 제○ 조 	

* A4형 양식으로 작성

*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규제개혁 위원회에 제출